아시아, '아시아식 민주주의'를 넘어

글 **박은홍** 본지 기획위원,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hpark@skhu.ac.kr

민주주의 역물결 헤치고,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향해
보편·특수의 대립 벗어나 인식지평의 융합 필요

지난 2006년 9월 19일 태국에서는 15년 만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한때 '쿠데타의 나라'라고 불리던 태국에 더 이상 쿠데타는 없을 것이라고 하던 태국 전문가들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흥미로운 것은 태국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대부분이 이 쿠데타를 지지했다는 점이다. 이 당시 회자되던 말이 '쁘라차띠빠따이뱁타이', 즉 '태국식 민주주의'이다.

싱가포르의 저명한 사회학자 추아벵화는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 헤게모니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논문을 통해 태국에서 선거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탁신 친나왓을 축출하려는 일단의 사회세력의 움직임 등을 두고 아시아에서 자유주의가 뿌리내리기 쉽지 않은 문화적 장벽을 거론하였다. 이러한 추아벵화식 논리구조 속에서 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은 서구의 자유주의와 대비되고, 때로는 반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집단적 사회성' 혹은 '아시아 공동체주의'로 표현된다. 태국에서는 '콤뺀타이', 즉 '타이다움'(Thainess)이 그것이다. 이때의 '타이다움'은 국가, 종교, 국왕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요컨대 '타이다움'은 대중을 어린아이로 보는 온정주의적 국가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태국의 지식인들은 세계화,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국가공동체의 중심에 국왕을 둔다.

리콴유 싱가포르 전 수상은 서구와의 차별을 겨냥해 '아시아적 가치'를 공공연히 옹호한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이다. 그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싱가포르와 같은 유교문화권에는 잘 맞지 않는다면서 사회불안, 경제침체 등과 같은 해악만을 수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리콴유를 비롯한 아시아적 가치 옹호론자들은 개인보다는 집단, 자유보다는 권위, 권리보다는 책임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전통을 거론한다. 한마디로 불일치와 경쟁보다는 조화와 협동을 중시하는 것이 유교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PAP) 정부는 1991년에 '공유해야 할 가치'를 공표했는데 그것은 싱가포르인들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으로 생존하고 성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국의 박정희 정권 시기에 강조되었던 충과 효도 '아시아적 가치'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타이다움'과 아시아식 민주주의

태국에서의 '타이다움'의 이론화는 멀리 20세기 초 와치라웃 국왕 시기로 올라간다. 그는 국가를 읔糐鍏 / 넓히는 과정에서 자비로운 어버이와 같은 국왕 이미지를 굳혀 나갔고 나아가 국왕개발계획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사릿 군부정

* 영화 '헝거게임'에 나오는 독재 저항 제스처인 '세 손가락 인사'를 흉내내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는 태국의 대학생들 ©연합뉴스

권 5년 동안 국왕은 무려 23개국을 순방하면서 군주제라는 전통문화의 보존을 해외에 자랑할 수 있었다. 물론 국왕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군부정권을 지지하고 공산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였다. 1980년대 초에 푸미폰 국왕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군 출신 쁘리디 파놈용 수상의 공세적인 포용정책을 계기로 게릴라 투쟁을 벌이던 공산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전향하였다.

2006년과 2014년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실질적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 민주주의에서 연거푸 승리한 탁신 친나왓 수상의 지지도가 국왕의 상징적 지위를 위협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왕을 지존으로 섬겨야 할 '타이다움'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탁신에 대한 지지는 '타이다움'으로부터의 일탈 행위였다. 농촌 유권자들의 계급적, 지역적 이해가 대표되는 다수결 민주주의로서의 선거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쿠데타 역시 '타이다움'으로 정당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선거를 보이콧한 민주당의 기여가 컸다. 민주당은 왕당파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정당으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방콕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콕인들이 주축이 된 '옐로우셔츠'와 지방 농민들이 주축이 된 '레드셔츠'의 대결은 '타이식 민주주의'와 '일반 민주주의' 간의 개념투쟁이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선거는 총탄으로부터 투표용지로의 전환(from the bullet to the ballot), 즉 '탈무장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총성없는 평화적 경쟁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승자와 패자가 각기 누가 될지 모르는, 이른바 '불확실성의 제도화'로서의 선거민주주의는 설령 패자가 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해주는, 즉 다수의 정치적 의사에 대해 소수 의사의 승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정치 기제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다수의 지지를 받는 권력에 대한 승복, 이것이 바로 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덕목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서구로부터 이식된 혹은 현지 엘리트들에 의해 모방된 자유민주주의는 1950년대의 버마에서 볼 수 있듯이 화해정치가 아닌 전쟁의 정치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다. 선거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였던 한국의 이승만과 싱가포르의 리콴유는 자유민주주의가 분열의 정치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자유권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좌파성향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독립 영웅인 수카르노 대통령은 교도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정지시켰다. 흥미롭게도 반미 지도자의 선봉이었던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가 한국의 5·16 쿠데타의 주역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식민지로부터 막 독립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국민국가 건설의 선결과제인 통합과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정치제도로 비치지 않았던 셈이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에서 좌, 우 진영을 막론하고 강압적 수단을 통한 통합과 개발이 추구된 배경이다.

* 타이식 민주주의와 일반 민주주의 간의 개념투쟁이 된 태국의 옐로우셔츠와 레드셔츠의 대결. ⓒ연합뉴스

아시아 탈식민 국가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국민통합과 개발 문제 해결에 적절한 정치제도로 비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핵심, 공정선거

실제로 통합과 개발 없는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은 아직도 총탄이 투표용지로 온전히 대체되지 못한 필리핀, 스리랑카 등이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에 앞서 강압적 방식의 통합과 개발을 정당화하는 서구 근대화론자들이 한국의 박정희 군부정권, 태국의 사릿 군부정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군부정권을 한시적으로 지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 근대화론자의 시각에서 중국,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라기보다는 개발독재 체제일 뿐이고 민주화를 위해 더 많은 안정과 개발이 필요한 근대화 단계에 있다. 또 이들의 논리에서 보자면 북한은 이들 사회주의 개발독재 모델을 따라가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예는 강압적 방식의 국민통합과 경제

* 일종의 '아시아식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려 했던 대표적인 정치인들. 왼쪽부터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전 대통령,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

개발의 성공이 바로 민주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일본은 이식된 민주주의로서 의회민주주의의 안착에 성공한 예외적 사례임에도 천황제의 근원적 보수성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중동의 왕정 국가들과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종교문화와 민족혁명이라는 개념 틀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중동 민주화의 물결에 합류하였던 국가들조차 민주화세력과 반대세력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심지어 강압적 방식의 국민통합과 경제개발을 배경으로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한국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다.

민주화의 공고화 조건 정치 엘리트들의 신념

이렇듯 아시아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주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여전히 느리고 변화가 다소 빨랐던 국가들도 반동의 흐름에 직면해 있다. 저명한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민주화의 공고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정치 엘리트들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했다. 그러나 적잖은 아시아의 권력 엘리트들은 '아시아적 가치'라는 문화담론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주의 이념과 논리를 동원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 논리에 지식인들과 대중들이 도전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란 쉽지 않다.

국가주의적 공동체 논리는 다종족사회의 경우 흔히 소수종족에 대한 차별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중국, 태국,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 그러하다. 자유권을 제한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개발독재 체제는 오히려 종족 간 균형정책을 중요한 정치전략으로 삼았다. 그러기에 이들 국가에서 소수종족들은 민주화의 진전이 다수종족의 전횡을 키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소수종족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이러하고, 실제로 지난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 32년 수하르토 군부독재 체제가 무너지자 종족, 종교 간 갈등은 민주화에 환호하던 시민들을 삽시간에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태국에서도 1997년에 탄생한 국민헌법의 첫 결실인 탁신 친나왓 정부 시기에 남부 무슬림 지역에서의 폭력사태가 최대 정국 불안 요인이었다. 미얀마에서도 정치적 자유화의 흐름과 무관하게 정부의 방관하에 소수종족 무슬림 로힝야에 대한 불교도들의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

* 미얀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소수종족 무슬림 로힝야 ©연합뉴스

실질적 민주주의 섬김의 정치문화

종족 간 화합의 문제는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와는 또 다른 차원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즉 실질적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대중들을 선거 시기에만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섬기는 정치문화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재분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문화가 종종 목격된다. 물론 이는 피플(people), 즉 대중의 정치적 식견을 무시하는 엘리트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용어 사용법이다.

동북아시아로 시야를 좁히자면, 개발 없는 독재체제의 위기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북한, 빠른 속도로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신중화주의를 연상케 하는 중국, 군사주의와 문명주의 양면을 갖고 있는 미국 등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때론 제약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이다. 오랜 서구 식민지 경험을 한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종교·종족 간 갈등, 빈곤, 정치화된 군부, 국가주의, 권위주의 잔재청산 등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결국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다져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토록 암담하던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향한 행보를 시작하고, 종족 갈등과 군부의 영향력으로 인해 휘청거리던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오히려 앞서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아시아식'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지평의 융합에 언젠가 성공하게 될 아시아를 기대하게 된다. 민주누리